



2023.06.02.(금)

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

## 조례(안) 등 검토보고서

### 《검토사항》

- 조례안 7건  
(제정4건, 개정3건)
- 민간위탁 동의안 4건

문화복지체육위원회

(전문위원 염 대 석)

#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1. 제안경위

- 제 출 자: 서희경 의원 등 21명
- 의안번호: 제5149호

## 2. 제안이유

- 성남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
-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과 사업비의 지원에 관해 규정함(안 제3조~제5조)
-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해 규정함(안 제6조)
- 지원금 환수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## 4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
  -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조
  -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
  - 「약사법」 제20조
- 기 타
  - 입법예고(2023. 05. 04. ~ 05. 11.): 특기할 사항 없음
  - ※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

## 5. 집행기관 의견: 동의

## 6. 검토 의견

### 가. 조례 제정의 취지 및 이유

-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 등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 및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법률적 근거로는, 지방자치단체의약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 강구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조제3항 및 제4항<sup>1)</sup>을 들 수 있음.
-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은 대한약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안임.
  -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2년 11월 15일부터 해열진통제, 소화제, 감기약 등 13개 품목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<sup>2)</sup>으로 정의하고 24시간 편의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.
  - 이에 일부 의약품 접근성은 향상되었지만,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결과(2018.)에 따르면, 소비자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 구매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문제 노출 및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음.

※ 환자안전문제: 용법용량 및 효능효과 미인지(17%), 사용기간 미확인(33%), 주의사항 미인지(38%)

※ 약사법 위반(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, 주의사항 미 게시, 미교육 종업원에 의한 판매 등): 86%

1)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,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2) 안전상비약품 종류 (13개 품목)

효능군(품목수)	품 목 명
해열진통제(5)	타이레놀정 500mg, 타이레놀정 160mg,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,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, 어린이부루펜시럽
감기약(2)	판콜에이내복액, 판피린티정
소화제(4)	베아제정, 닥터베아제정, 웨스탈골드정, 웨스탈플러스정
파스(2)	제일쿨파프, 신신파스아렉스

- 아직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 시민의 응급 의약품 필요상황에 대응하기는 부족함.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·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
-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통해 심야공공약국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경우 심야공공약국 이용자의 만족도는 96.7%로 나타났음.  
(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 평가, 의약품정책연구소, 2016.11),
-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심야공공약국의 필요성은 88%(편의점 판매 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 보고서, 리서치앤리서치, 2016.11)로 심야공공약국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

- 참고적으로 ‘공공심야약국’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‘16년부터 40개<sup>3)</sup> (광역시 11, 기초 29)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있으며, 우리 시의 경우 「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」(2022. 1. 6. 시행)를 근거로 현재 5개소(수정1, 중원1, 분당3)가 매칭사업(경기도 30%, 지자체 70%)으로 운영되고 있음.

#### ※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현황

(2023.03.31. 기준)

구 분		소재지	최초지정일	일평균 이용건수	비고
수정구	위례수약국	창곡동	2019.01.21.	13.7건	
중원구	마이팜약국	금광동	2018.03.01.	6.1건	
분당구	야탑원약국	야탑동	2021.11.01.	12.3건	
	성빈약국	구미동	2022.05.01.	3.8건	
	알파약국	구미동	2023.01.01.	1.03건	

#### 나.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

제정안은 7개의 본칙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3) 광역 11개: 서울, 인천, 대구, 대전, 광주, 울산, 경기, 충남, 충북, 경북, 전남

기초 29개: 서울 강동구·광진구·노원구·도봉구·서초구·성동구·영등포구, 세종시, 인천 남동구·서구·연수구·중구·미추홀구, 대구 중구, 경기 광명·부천·시흥·양주·양평·오산·화성, 경남 창원, 충남 천안·예산·계룡, 전북 군산, 전남 나주·여수·영암

- **안 제1조(목적)**는 조례의 목적을 ‘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’을 규정함
- **안 제2조(정의)**는 조례의 정의를 ‘「공공심야약국」이란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’로 정의하였음.
- **안 제3조부터 안 제5조**에서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·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, 현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등에 관한 직접적인 법 규정은 없는 상태이나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조에서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”하여야 하고, “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·재정적 지원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 
「지역보건법」 제2조 제3호에서 “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”에 “약국”도 포함되어 있으며,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“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 등에 인력·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음.

#### 〈참고: 심야공공약국 운영 방안〉

##### ○ 운영형태

- 개인약국형: 평일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형태로 경기도의 사례와 같음
- 24시간 서비스형: 약국 폐문 이후 긴급 콜을 통해 상담 또는 투약하는 형태로 제주도의 사례와 유사하며 개인약국이 신청하는 경우는 개인 약국 전화번호가, 약사회가 당번제로 운영하는 경우 약사회에서 지정한 번호가 긴급 콜 번호가 됨
- 지역사정에 따라 지역약사회 주도에 의해 평일은 개인약국형, 주말은 24시간 서비스형으로 하는 절충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

##### ○ 재정지원

개인약국형은 경기도의 심야공공약국 약사의 시간당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24시간 서비스형은 야간에 전임자를 고용한다고 가정한 월 급여액을 450만원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것임

- 개인약국형은 시간당 3만/ 24시간 서비스형은 일당 15만

- **안 제6조(공공심야약국의 관리)**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기적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약국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 결과가 비효율적일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며,
- **안 제7조(지원금의 환수)**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보조금 관리의 해이를 막기 위한 근거사항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# 다. 종합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서 경증환자가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심야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됨.
- 이에 공공심야약국 관련 시책 추진 및 지원 규정은 자치 조례로서의 법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, 달리 위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조항이 아닌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보호·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직접적 위임이 없더라도 자치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공공심야약국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건의료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. 더불어 약사직능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보건의료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.

# 관계 법령 발췌서

## □ 보건의료기본법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(財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,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3. 17.]

## □ 지역보건법
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·연구, 정보의 수집·관리·활용·보호, 인력의 양성·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3.>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 □ 약사법

- 제20조(약국 개설등록)**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.
-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.

1.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
2.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
3.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·변경 또는 개수(改修)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
4.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(專用) 복도·계단·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

⑥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